

민주 경선 돌입...李 ‘AI’·김동연 ‘청년’·김경수 ‘적통’

李, ‘유능한 후보’ 이미지 주력
김 지사, 청년 만나 보폭 넓히기
김 전 지사, DJ·盧 참배 文 예방
김두관, 경선을 반발 불참 선언
‘당원 50%·국민 50%’ 룰 확정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들이 14일 ‘인공지능(AI)’과 ‘청년’, ‘적통’ 등 저마다 다른 콘셉트로 공개 행보를 시작하며 6·3 대선 후보 경선 레이스의 시작을 알렸다.

이재명 예비후보는 인공지능을 내세우는 성장 행보로 스타트를 끊었다.

첨단기술과 성장을 전면에 앞세우며 ‘유능한 후보’, ‘준비된 후보’ 이미지를 각인시키고 안정감을 부각해 중도층 표심을 흡수하겠다는 전략이다.

이 예비후보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가 민간투자의 마중물이 돼 AI 관련 예산을 선진국이 넘는 수준까지 증액하겠다”며 “이를 통해 AI 투자 100조원 시대를 열고 ‘AI 세계 3대 강국’으로 우뚝 서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공약 발표 직후에는 AI 반도체 설계 스타트업 ‘퓨리오사AI’를 방문했다.

퓨리오사AI는 올해 초 페이스북의 모회사인 메타의 인수 제안을 거절하고 독자 개발 프로젝트에 집중하기로 하면서 주목 받은 한국 AI 기업이다.

이 예비후보는 글로벌 AI 반도체 시장에서 엔비디아의 독점을 깰 기대를 받는 토종 기술력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백준호 대표 등과 간담회를 통해 첨단 산업에 대한 국가 주도 투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예비후보는 “우리나라가 AI 분야에서 계속 뒤처지고 있다는 걱정을 국민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14일 서울 강남구 퓨리오사AI에서 퓨리오사AI NPU를 살펴보고 있다.

이 많이 하고 있는데 퓨리오사가 그렇지 않다는 새로운 희망을 보여주고 있다”며 “국가 공동체가 어떤 역할을 통해 AI 사회에 대비해 나갈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비명(비이재명)계 주자들은 당 경선 규칙(룰) 관련 잡음 속에서 각자 다른 행보를 보였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이날 오후 청년들과 만나는 공감 콘서트를 가졌다.

김 지사는 앞서 지난 12일 미국 관세 대응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하며 인천공항에서 대선 출마 선언을 하고 14일 귀국해,

이날 청년 콘서트로 본격적인 대선 경선 일정을 시작한 셈이다.

경제 관료 출신인 김 지사는 경제 전문가로서 해안과 현 경기지사로서 도정 경험을 바탕으로 유권자, 특히 청년에게 직접 다가가려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당내 기반은 이 예비후보에 비해 약한 만큼, 기존 정치권의 문법을 따르기보다는 자신의 강점을 내세워 차별화하는 데 주력하는 것이다.

전날 세종에서 출마 선언을 한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이날 오전 국립서울현충원

을 방문해 김대중(DJ)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다. 참배 후 방명록에 ‘빛의 연대와 연정으로 더 크고 단단한 민주주의의 나라를 만들겠다’고 적었다.

김 전 지사는 오후에는 경남 양산 봉하마을을 찾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꿈꾼 국민을 통합하는 나라, 사회 대개혁으로 사람 사는 세상이 만들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자신이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 모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민주 “尹, 뻔뻔하게 현재 판결 정면 부정” 국힘 대선주자들, ‘한덕수 출마론’에 날선 견제

혁신 “뉘뜨리만 늘어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14일 내란 혐의 형사재판에 처음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혐의를 부인하고 ‘평화적 대국민 메시지를 위한 계엄’ 등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일제히 비판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논평에서 “윤석열이 오늘 형사 재판 법정에서 뻔뻔하기 이를 데 없는 태도로 내란죄를 부정했다”며 “헌법 정신과 주권자에 대한 모독이고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한 정면 부정”이라고 밝혔다.

한 대변인은 “대통령직에서 파면당해 관저에서 쫓겨나며 ‘다 이기고 돌아왔다’는 정신 승리로 국민을 경악시킨 것은 악과였다”며 “셀 수도 없는 궤변으로 현재 판결을 정면 부정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석열의 사과와 반성은 헛된 기대로, 자숙은커녕 위헌적 불법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짓밟고도 처벌을 피하려는 법꾸라지(법 미꾸라지) 행태로 국민을 조롱했다”며 “더욱이 내란 수괴가 형사 재판 법정을 헌법정신과 주권자를 모독하는 장으로 만들고 있는데 재판부는 그런 내란 수괴를 감싸고 있으니 역장이 무너진다”

고 주장했다.

한 대변인은 “구속 취소도 모자라 재판정에 지하 통로로 출석하게 해주고,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도 감춰주는 특혜를 받으니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얼마나 우습겠는가”라며 “법치주의와 국민은 안중에 없는 윤석열의 망언을 지켜보는 국민께서는 가슴에 전율이 나실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김보현 수석대변인도 “윤석열은 현재의 파면 선고에 승복하지도 않았고, 나라를 어지럽힌 데 대해 국민께 사과한 적도 없다”며 “오늘 형사재판에서는 진술이랍시고 뉘뜨리만 늘어놨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윤석열과 변호인단은 현재에서 판판이 깨진 주장을 내란 재판에서 반복하고 있다”며 “현재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황당한 변론이 형사재판에서는 통할 것이라고 믿지 않고서야 하기 힘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이 이날 변론 중 ‘피고인’이 아닌 ‘대통령’이라는 호칭을 쓴 데 대해서도 “검찰은 재판부에 항의하고 판사는 경고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당 지도부, 신경전 과열 경계
민주 “내란수괴 후계자” 비판

국민의힘 대선주자들이 14일 당 안팎에서 제기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출마론에 날선 견제구를 날렸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에서 “한 대행이 지금 할 일은 이 부분(통상 위기)을 해결하는 데 집중해야 되는데 우리가 (한 대행을) 너무 흔들고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당내 기득권 세력들이 한총리 얘기를 지나가면서 하는 줄 알았다”며 “계속 의도적으로 언론에 내고 마치 이 경선은 의미 없는 것이고, 나중에 한 총리랑 단일화를 할 것이다. 이런 식의 얘기를 정말 진지하고 강력하게 묵살 걸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상식에 반하는 정치 행태이기 때문에 말 안 하고 있는 것”이라며 “대선을 중립적으로 관리할 분을 출마시킨다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고 꼬집었다.

당 지도부는 ‘한덕수 대선 출마론’을 거론하지는 않으면서도 이를 둘러싼 신경전이 과열되는 것에 대해서는 경계하는 모습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연합뉴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모든 후보는 같은 출발선에 서야 하고 같은 기준 아래 경쟁해야 한다”며 “특정인을 옹립하는 일도 누구에게 불이익을 주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부터 15일까지 이틀간 대선 경선 후보자 등록을 받는다.

이후 서류심사를 거쳐 하루 뒤인 16일 1차 경선 진출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경선 후보는 김

두에 몸담았던 민주당의 ‘적자’라는 정체성을 강조해 타 후보와의 ‘적통 경쟁’에서 앞서나가겠다는 행보로 풀이된다.

김 전 지사 측은 “3대 민주 정부의 경험을 바탕으로 통합과 연대의 새 민주 정부를 만들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두관 전 의원은 이날 경선 불참을 선언했다.

김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대중·노무현 정신을 저버리고 배제한 민주당 경선을 거부한다”며 국민참여 경선룰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김동연 지사도 경선 룰과 관련해선 CBS 라디오에 나와 “원칙과 전통이 파괴되고 있고 후보자 간 협의가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앞서 당 대선특별당규준비위원회는 지난 12일 권리당원투표 50%, 국민여론조사 50%를 합산하는 국민참여경선 방식을 경선 규칙으로 결정했다.

경선 규칙은 당원 투표와 중앙위원회 온라인 투표(찬성 96.56%)로 이날 의결됐다.

권리당원은 경선일로부터 1년 이전에 입당하고, 최근 1년 사이 6개월 이상 당비를 낸 당원이 대상이다.

여론조사는 안심번호로 추출한 100만 명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 응답만 합산한다.

지난 19대와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민주당은 권리당원과 일반국민을 모두 선거인단으로 포함해 투표를 진행하는 국민경선(국민선거인단) 방식으로 본경선을 진행했다.

민주당 특별당규위는 역선택 우려와 당원 권리 강화 등을 고려해 21대 대선 경선 방식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